

전국 시·도지사 “도 폐지 반대”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경제 살리기 시급”...성명 채택은 일단 유보

‘도(道) 폐지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동 성명 채택은 유보했다. 경제 살리기 가 당면 과제이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박광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16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회의를 열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반대 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시급하지 않다고 일단 유보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채택하려던 성명 초안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실익보다는 국력 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갈등 등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개편보다는 지방분권화가 더욱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창의적 행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방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자치입법·지방재정·교육·경찰 기능 등을 조속히 이양, 광역지방정부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논의의 주체도 주민과 이를 대표하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의 성명 초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현재는 경제살리기 시급한 현안 과제”라며 “도 폐지를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현재로서는 시급하지도 않고, 논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도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명 채택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지사는 또 앞으로의 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전국 행정단위를 60~70개로 줄이는 행정개편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 “행정체제 개편의 불합리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같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도 폐지’를 핵심

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구성을 의결, 내년 지방선거 이전 결론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할 태세다.

정부는 국회를 뒷받침할 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 국회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4일 광주일보 주관으로 열린 광주·전남 토론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도를 폐지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간 안장장치가 사라져 오히려 지방의 중앙 예측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시 설

‘학자금 빚쟁이’로 전락하는 지역 대학생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학자금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금 연체율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지역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 신청 건수는 4만3천811건으로 1년 전 대비 3.7%포인트나 늘었다. 이 가운데 원금이나 이자가 1개월 이상 못 낸 연체자 비율은 광주가 2%, 전남 2.2%로 전국 평균 1.9%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신용불량, 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한 사례는 광주가 2007년 924건에서 1천765건, 전남은 777건에서 1천388건으로 늘었다. 1년 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지역 대학생들의 등록금 연체율과 대출 거부 사례가 높은 것은 경기침체에 다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제사정 때

문으로 풀이된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내달라며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제정 운동’에 나섰겠는가.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자치단체도 나서야겠지만 정부차원의 지원부터 있어야 한다. 현재 7% 수준의 대학등록금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추거나 완전 무이자로 해 대학생들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 등록금 상환제, 후불제, 차등 책정 등 탄력적인 등록금 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만하다. 대학생의 신용불량자 양산만은 막아야 하지않겠는가.

실직자 80%가 여성, 우울한 ‘여성의 날’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여성근로자들이 정리해고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여성근로자를 인력구조 대상의 1순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남성 취업자는 1만 9천명이 줄어든 반면 여성은 8만 4천명이나 감소했다. 여성이 남녀 전체 고용 감소분의 82%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와 30대 여성의 일자리가 1년 전 대비 20만 개 가까이 감소했다. 20대 여성 일자리의 경우 197만 9천 개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8천 개가, 30대 여성은 211만 2천 개로 8만 7천 개가 각각 줄어든 것이다.

이들 반영하듯 전업주부로 전환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올 1월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여성은 전년에 비해 14만 7천명이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2007년 2만1천185명에서 지난해 2만9천145명으로 늘었다. 기업들이 임신·출산과 관련해 여성근로자에게 해고나 다름없는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들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 임시·일용·파견 등 근로조건과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벌인다고 요란을 떨면서 한편으론 비정규직·임신·출산 여성근로자에게 해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8일은 여성의 권익향상을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감원바람에 속수무책인 여성근로자들 에겐 그 어느 해보다 출고 우울할 뿐이다. 겉으로는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여성들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삼성 신입사원 채용 개시...12일부터 원서접수

삼성이 6일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작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전기·테크윈·SDS·생명·화학·중공업·정밀화학·물산·제일모직·에스원 등 삼성계열사들은 일제히 이날 오후 삼성 채용페이지 ‘디어삼성(www.dearsamsung.co.kr)’에 2009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안내문을 게재했다.

지원서는 공통적으로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받고, 삼성직무적성검사는 이달 22일 진행된다. 올해 2월 이미 졸업했거나 8월 졸업 예정자로서, 전학년 평점 평균이 4.5점 미만 기준으로 3.0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해외학교 출신 지원자의 경우 작년 7월 이후 졸업했거나 오는 6월까지 졸업이 가능해야 한다. /연합뉴스

기아차, 정성은·서영종씨 대표이사 선임

기아차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에 정성은 부회장과 서영종 사장을 선임했다.

지난해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던 정 의선 사장은 대표이사에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차는 이와 함께 4천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아차가 BW 발행을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열린 기아차의 제65기 주주총회에



〈정성은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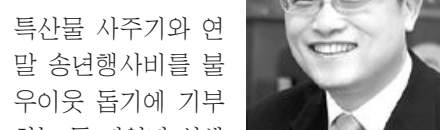
〈서영종 사장〉

서는 임기가 끝난 정몽구 회장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신세계, 이장환 대표이사 재선임

(주)광주신세계는 6일 백화점 9층 다목적홀에서 제14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이장환(51·사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이 대표는 이에따라 앞으로 3년간 광주신세계를 이끌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취임해 1년간 지역



특산물 사주기와 연말 송년행사비를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지역 밀착형 친화사업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은미기자 emlee@



광주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길선)는 6일 치평동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 치평동 시대를 열었다. 지상 2층 건물의 신청사는 지난해 10월 착공, 총 공사비 7억7천여만원이 투입됐다. <광주시 서구선거관리 제공>

‘순천만 관광 예약제’ 검토

노관규 순천시장은 “하루 1천명으로 제한 훼손 방지”

순천시가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예약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습지인 순천만에 관광객들이 몰려 자연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6일 “순천만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순천만을 방문해 천혜의 자연환경

이 훼손될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 예약제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예를 들어 하루 방문객을 1천명 가량으로 제한해 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을 받아 관광객들을 입장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노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순천만 방문객을 제한해야 (환경 훼손을 막아) 순천만의 주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며 관광객들의 동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특히 “순천만이 개발압력에서 벗어나려면 시민의 자발적 헌금이나 기부금을 토대로 자연유산을 사들여 이를 영구히 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시장은 “2013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순천만의 보존가치를 시민뿐 아니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정중환 국토 “4대강 살리기에 지역업체 우대”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오후 부산을 방문해 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대저지구 생태하천

발했다. 정 장관은 6일 오후 부산을 방문해 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경우 510억 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부산시에 발주를 100% 위탁했다”며 “지자체 발주 외에 중앙에서 탄기방식으로 발주하더라도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30~40%까지 높이도록 권장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적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그래! 잘못 뽑은 백성 탓이다

수질정화 뛰어난 왕버들 대량번식 성공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하천 생태복원 활용 기대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6일 수질 정화작용이 뛰어난 왕버들 나무 묘목의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물속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왕버들·갯버들·키버들 등 토종 버드나무와 영국, 스웨덴, 중국 등 국내외의 관상용 버드나무 12종을 수집, 영양번식체를 이용한 대량번식 방법을 개발했다.

이 가운데 왕버들 나무의 경우 수령이 오래된 나뭇가지를 잘라 한 달 이상 저온의 젖은 모래에 보관한 꺾꽂이를 하면 91% 이상 뿌리가 돋았고, 2m 높이의 묘목으로 자라났다.

이번 대량번식 성공으로 버드나무를 이용한 하천 생태사업 및 수변지역 경관 조성에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앞으로 꺾꽂이 번식 방법을 이용해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12종의 다양한 버드나무를 이용해 수질, 번식, 육성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번식기술과 영양제를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종은 전 세계적으로 약 350종이고, 우리나라에는 40여 종이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F A X 220-661> <F A X 227-9500>	광고매점국 2200-521 <F A X 220-551> <F A X 227-9500>
정지부 2200-634 <F A X 220-669>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F A X 220-669> <F A X 222-4267>	체육팀 2200-691 <F A X 222-4267>
사회1부 2200-612 <F A X 222-4267>	사진부 2200-691 <F A X 222-4267>
사회2부 2200-692 <F A X 227-0118>	조사부 2200-571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